국가사이버안보법

사이버폴리싱 연구센터장

정태진

관련 쟁점 사항

- 국가안보 vs. 민주주의
- 관련기관 조정 vs. 통제
- 사이버테러 방지활동

최근 국제 동향

- 미국정부 중국 해커들의 지적재산권 침해 항의
- PRISM 폭로 / 스노든 홍콩 경유 망명
- 서방국가의 중국산 PC 사용금지
- 여러 형태의 정보누출/ 충전기로 위장

국제사회 노력

- 국제협력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런던, 부다페스트, 서울 2013)
- 국제법: 사이버교전수칙 (탈린 매뉴얼 /NATO/2013/04)
- 미국과 서방국가 합동훈련 (DHS/사이버 스톰)

최근 국내 동향

- 사이버안보법률 제정 어려움
- Action plan 방어적/기술적 대응
- 북한의 사이버전력에 대한 정보부족
- 국내업체 북한에 정보제공

성공적인 법제정 전략

- 의존도 높은 폴리싱 전략 반영
- By pass 전략 (북한 및 해외 정보수집과 공격적인 작전 외 민간부문 간접통제)
- Mandatory reporting 과 법적 배상책임을 통해 통제 가능

법집행 모델과 사이버폴리싱 전략

Kozlovski (2005)의 법집행 모델과 사이버폴리싱 전략

▶ 폴리싱 전략 전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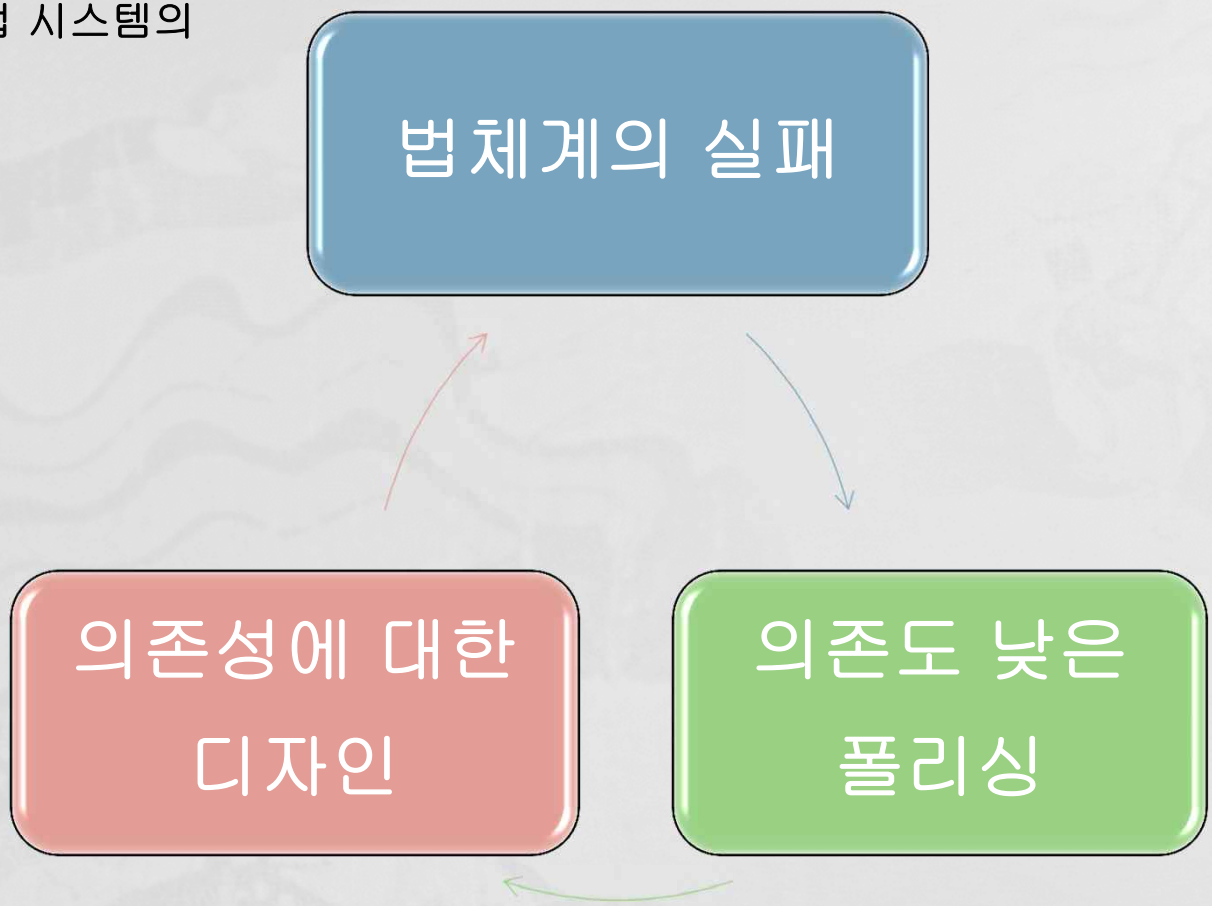
법집행	사이버폴리싱
수동적 대응	능동적 대응
증거위주 수사	정보수집
법률 통제	규정
유연한 직무판단	자동화된 판단
법적 제재 유보	법적 제재 부재
수동적인 피해자	능동적인 피해자
범죄 중심	범죄와 비행의 중간

▶ 조직 구조 :

법집행	사이버폴리싱
정부 공무원	다양한 구성원
중앙 통제	분권화
제한된 지역	국제적
폴리싱 권한 독점	폴리싱 권한 위임
개별적 법집행 권한 제한	개별적인 권한 부여

법집행 모델과 사이버폴리싱 전략

- 사이버 관련법 시스템의 문제 :



의존도 높은 폴리싱

인터넷 질서유지 집합체

다원화된 사이버폴리싱

유비쿼터스 폴리싱

하이브리드 설계

다원화된 폴리싱

1. 인터넷 사용자/ 사용자 그룹(U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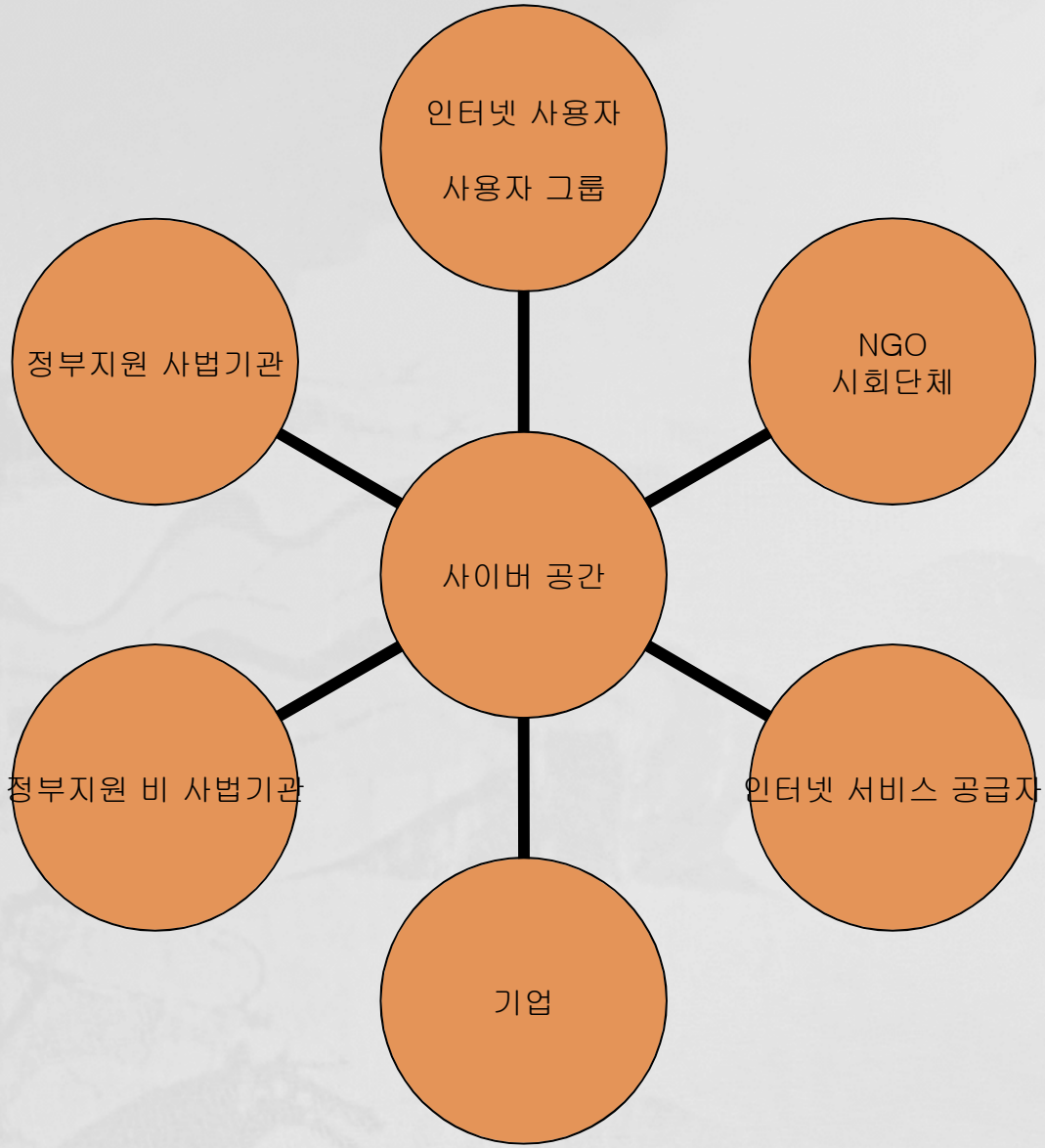
2. 사회단체 (Non-govt., Non-Police Hybrid)

3.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ISP)

4. 기업 (Corporate)

5. 정부기관(State-Funded Non Police)

6. 사법기관(State-Funded Police Org.)


인터넷 사용자
사용자 그룹
정부지원 사법기관
NGO
시회단체
사이버 공간
정부지원 비 사법기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기업

유비쿼터스 폴리싱

- 불법적인 활동을 감시, 통제, 연기, 차단, 감지, 예방하며 리스크 제거에 중점을 둔다” (Kozlovski, 2007: 107).

하이브리드 설계

- '중앙집중형과 분권형' 모델 사이에서 책임 분산
- 피해자와 제3자 사이에서의 규제
-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설계를 지향하는 '오픈 인텔리전스 (open-intelligence)'

By pass 전략

- 미국 해외정보감시법 (US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Foreign powers or agents of foreign powers

외국정부, 국민, 기관, 회사, 주재원, 영주권자 등 포함

사이버안보법 적용범위

- US FISA 와 비슷하게 적용범위 확대
- 온라인/오프라인상의 관계 모두 적용

즉시신고 의무제도

- UK banks and businesses in process
- California, US : corporate data breach reporting in progress
- 사이버공격 즉시신고 의무제도 도입

책임배상보험 제도도입

-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제 3자 피해에 대한 책임배상제 도입
- 컴퓨터 바이러스, 오보, 명예훼손, 비밀유출, 지적재산권 침해, 사기 등
- 보험가입자의 가해행위도 커버

컨트롤타워의 역활

- Information clearing house/ IC3
- Information brokering/ Ericson & Haggerty

사이버테러 방지활동

- 입체적인 정보수집활동
- 사이버폴리싱 전략 도입
- 사이버 민방위훈련

결론

- 사이버테러 방지활동에 대한 범위 설정
- 사이버테러방지활동과 관련된 감사기능
-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 민관 및 국제협력강화